

다산포럼

정조와 함께한 옥류천 산책



김준혁
한신대 평화교양학부 교수

1781년(정조 5) 9월 3일, 정조는 규장각 전·현직 직제학(홍문관·예문관·규장각 정3품)인 정민시, 서호수, 심연조, 그리고 호조참판 강세황과 함께 창덕궁 후원의 옥류천(玉流川) 계곡으로 들어갔다.

옥류천 일대는 가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계곡에서 흘러내린 시냇물이 여름철만큼은 아니었지만, 창덕궁 옥류천의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정조가 신하들과 함께 후원의 옥류천을 산책한 것은 표암 강세황이 자신의 어진(御眞)을 그린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강세황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으로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이라 불렸다. 정조는 며칠 전 8월 26일, 강세황에게 어진을 그리게 하고, 9월 1일 완성한 초상

화를 규장각에 봉안하게 하였다. 국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첫 어진이였기에 정조의 기쁨은 남달랐을 것이다.

이틀 후인 9월 3일에 어진을 진람하고 더불어 규장각에 근무하는 강세황도 보기 위해 규장각을 찾았다.

정조는 얼마 전 읽은 책의 문구를 병풍으로 만들어 자신의 서재에 두고 싶다고 그 글귀를 강세황이 직접 써 주기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더욱 당황스럽게도, 글씨를 쓴 후 늘 것인지 놓고 나서 글씨를 쓸 것 인지를 물어본다. 평소 학문 연구와 정치적 토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국왕인지라 강세황은 대답을 머뭇거리다. 그런 강세황에게 글씨는 후에 쓰자며 정조는 규장각에 있는 모든 신하를 데리고 밖으로 나온다.

정조가 앞장서서 걸어간 곳은 놀랍게도 옥류천 계곡이었다.

창덕궁 내에 가장 신비로운 공간인 이곳은 중찬이나 경재(卿宰·재상) 등과도 연회를 베풀지 않는 국왕만의 공간이었다.

궁궐의 궐내각사 공간인 외조(外朝), 인정전과 선정전 등 국왕의 정치공간인 치조(治朝), 그리고 희정당과 대조전 등

내조(內朝)의 공간에서 능선을 넘어선 연조(燕朝)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옥류천은 국왕만의 신성한 공간으로, 궁궐의 다른 그 어떤 공간 하도 위상이 다른 곳이다. 국왕의 전용공간이 공간을 정조는 신하들에게 개방하고 이들과 함께 산책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진을 그린 강세황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도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옥류천 일대의 개방은 상상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다.

신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더욱이 정조는 앞장서서 신하들에게 그곳의 정자와 꽃에 대해 설명까지 해주는 것이었다.

정조와 함께 옥류천 계곡을 산책한 강세황은 "어찌 우리 임금께서 몸소 이 미천한 신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뛰어난 경치를 하나하나 일러 주시고 은화한 열굴과 따뜻한 음성으로 한식구처럼 하신 것과 같겠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건대 이와 같이 성스럽고 밝은 세상에서 다시 없은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명하니 하늘 삼계의 세계에 오른 꿈에서 깨어났나.의 심했다"며 호가유금원기(扈駕遊禁苑記)에 기록했다. 정조는 또 규장각 앞의 부용지(芙蓉池)에서 신하들과 함께 낚

시를 하고, 그들과 유희하게 술을 마시며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 했다.

이처럼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던 정조의 창덕궁 옥류천 군신동행(君臣同行)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다. 정조는 궁중 내 금단(禁斷)의 공간인 옥류천을 활용해 즉위 초반부터 자신의 정치 구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당파가 다른 신하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한 것이다.

소중한 자신만의 공간을 신하들에게 선뜻 내어 줌으로써 신하들은 정조의 의도를 심본 이해하게 됐으며, 그가 제시하는 개혁 정책을 받아들이고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치 개혁 추진과 경제적인정이 이루어졌고, 정조는 오늘날까지 개혁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과 내년 총선에 따른 패스트 트랙 대립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치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정조의 포용과 리더십을 본받아 국민을 위한 따스한 정치를 해 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社說

무등산 자락에 쓰레기와 함께 버린 시민의식

요즘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 산자락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합부로 버려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에서 발생해 처리된 쓰레기는 지난 2017년 14.3t, 지난해에는 14.4t이었고 올해 역시 11월까지만 해도 벌써 12.2t이다. 매년 14~15t 규모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 내에서 나온 쓰레기일 뿐이고 공원 경계 구역과 인접한 산자락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그제 찾아가 광주 북구 석곡동과 망월동 등 무등산 국립공원 경계 구역과 산자락 곳곳에는 소파와 매트리스 등 각종 폐가구는 물론 생활 폐기물이 넘쳐 났다. 일부 지역엔 배추 등 감장 쓰레기까지 버려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문제는 국립공원 경계 밖의 쓰레기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관찰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거나 단속에 나서지 않은 채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망월·석곡동 관할 지자체인 북구는 분기별로 수거를 하는데 한 차례에 50t 짜리 포대 20개 분량의 쓰레기가 나온다. 하지만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아 방치된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무등산 자락에 쌓여 가는 쓰레기를 놓고 관찰을 따지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쌍사나운 일이다. 국립공원사무소와 북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일단 버려진 쓰레기는 치우고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행정 공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이다. 무단 투기는 양심까지 함께 버리는 행위다. 탐방객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고 버려진 쓰레기도 주워 가는 친환경 실천으로 소중한 무등산을 미래 세대에 오롯이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 시행 1년 음주운전 많이 줄었지만

지난해 9월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윤씨의 사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음주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감소했다고 한다. 두 번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자도 약 35% 줄었다.

내일(18일)은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이 연말 연시에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3년간 연말 행사와 화식이 많은 12월에 음주사고 건수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도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 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간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혈가, 식당, 유흥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 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매년 연말에 접어들면 음주운전 처벌률이 높아지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흐려진다고 한다.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음주운전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나쁜 버릇이다.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과 이웃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NGO칼럼

학벌주의 철폐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지난해 12월 28일 국가교육회의 위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학 입학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공정과 단순, 국민의 공감이었다.

현재 대입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부 장관 교체 등 여러 논란 끝에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하 학종)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학종이 고소 명성과 실질적인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

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며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신 고교 블라인드 처리, 세부 평가 기준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보완 정책에 덧붙여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 전형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시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학종이 고소 득중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확

인할 수 없었으며, 사흘 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해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학종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고교 서열화 등 불공정 사례일 뿐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11월 28일 전격적으로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 등에 따른 정시 확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입 제도가 아니라 학벌 서열이다.

이미 큰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 서열임을 밝히고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경영형 사립대 등 대학 개혁 정책을 공약하였다.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학업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교 개혁의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큰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은 학벌 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설령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시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굳이 대부분이 사립대인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정시 확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학벌주의 발상이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가 여전히 부의 세습과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 기반임을 드러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학벌 서열에 따른 권력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학벌 기득권을 고소득층이 독점하고 세습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보다 여론에 기대는 무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학벌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고

“내가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해진다”



김삼호
광주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행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 것이다. 국가를 비롯해 지방 분권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정부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장 지상주의로 파생된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 기후 변화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산적한 지금이 행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시기다. 포기, 좌절, 우울, 절망, 빈곤, 분노 등 부정적 요소들이 일상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자치 행정은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 인간 존엄성 보장, 내일에 대한 희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같은 보편적 토대 위에 공감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복 사회를 만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다.

필자는 '행복 광산'을 위한 주춧돌로 민선 7기 취임 직후부터 안전 광산 프로젝트, 기업 주치의 센터 설립, 영구 임대 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부서간 협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복 광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관념적 행복을 실제적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하고, 광산구 1600여 공직자들이 구민의 행복과 안녕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자리였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조직, 예산, 법률 등을 마련하며 행복 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신설될 과 단위 행복 전담 부서는 새해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행복 정책관은 부서간 협업을 토대로 광산구 행복 사업을 총괄하며, 42만 광산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행복 도시 1번지' 광산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은 1단계 '행복 정책 제도 마련 및 분위기 조성', 2단계 '시민 행복도 조사 및 행복 광산', 3단계 '행복 정책 거버넌스 구축', 4단계 '행복 정책 성과 모니터링', 5단계 '대한민국 행복 도시 1번지 광산 브랜드 정착' 순으로 추진된다.

추상적, 주관적인 '행복'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고, 정책의 심사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행복 지표를 개발 중이다. 사람, 공동체, 환경 분야 78개 항목에 달하는 지표를 통해 매년 시민 행복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과 계층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행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한계가 모호하고, 지방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와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매년 조사하는 시민 행복도 측정도 선출직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한 개인이 모여면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행복 정책에 매진해 볼 생각이다. 개인이 행복해지면 배려와 포용, 희망, 균형 등 긍정적 요소가 확산될 것이라고 믿는다.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 행복 광산 비전 선포식에 강연자로 나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22차례 방문한 덴마크의 행복 기반이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한 행복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 어제도 행복했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19세기에 카메라를 개발하려는 발명자들이 고풍한 것은 이미지를 영구히 고정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찾는 것이었다. 마침내 1826년 프랑스 니에스(1765-1833)가 현대적 의미의 최초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여덟 시간이나 노출해 찍은 사진을 '태양이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의 '헬리오그래프'(Heliograph)라고 이름 붙였다. 니에스와 파르너가 된 프랑스 다게르의 1839년에 은으로 도금한 구리판을 사용하는 다게레오

800여 점을 공개했다. 디지털화한 사진들은 'e뮤지엄'(www.emuseum.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사이트에 '전남'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순천 송광사와 화순 운주사·쌍봉사, 해남 대흥사 등 많은 문화재 사진들이 뜬다.

수많은 이미지 가운데 전국 각 지역별로 남녀 체격을 측정한 사진들이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광주를 비롯해 나주, 여수, 순천, 화순, 진도 등지에서 성인 남녀를 5~10명씩 두 줄로 세워 상반신

우리건판 사진

을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했다. 흡사 영화 '25시'에 나왔던 인종학 연구 장면을 연상시킨다.

조선총독부에서 파견한 우리건판 사진가는 작은 상자만한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킨 뒤 검은 보자기를 둘러쓰고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사진을 촬영했을 것이다. 카메라 앞에 억지로 끌려와 피사체가 돼야 했던 식민지 조선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20세기 초 식민시대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건판 사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역시 극일(克日)의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국립 중앙박물관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촬영한 우리건판 사진 3만 /송기동 문화2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 국문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